

“피감기관 통보 오면 윤리특위 회부”

국회, 김영란법 위반소지 38명 대해 공지

국외활동심사위 꾸려 의원 해외출장 심사

국회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국회의원 38명 등에 대해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 오면 문화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징계 관련 규정에 근거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어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공공기관 중 한 곳인 국제협력단(KOICA)은 오는 31일까지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상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는 문화상 국회의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피감기관들이 국회의원의 대외활동을 위해 따로 책정해놓은 예산”이라고 설명한 뒤 “국민권익위는 표면상으로 볼 때 위반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위반 소지 여부를 최종적 판단은 피감기관에서 한다. 국회는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 결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국회 자체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명단을 통보해서 이 사안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라고 국민권익위에서 말한 곳은 피감기관”이라며 “국회는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 명단을 발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변인은 ‘위반 소지가 불거진 비용과 일정 공개 요구’에는 “피감기관에서 전부 공개할 것이라고 본다”

고 말을 아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문 의장 출장에 관한 일정 포함 여부에는 “관광 일정은 포함이 안 됐다”고 부인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는 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교섭단체들이 추천한 6인 이내)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게 된다”며 “이 기구 활동을 통해 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외교위원회는 이날 ‘의원외교활동’ 관련 입정문을 내어 ‘의원외교활동은 해당기관 예산서에 명시된 사업과 예산에 따라 추진한다’며 ‘KOICA가 국민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도내 자동차산업 활성화 ‘머리맡대’

도의회 농경위, 현대차 방문

공장관계자와 간담회 실시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비회기중인 8일 완주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아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지의정활동은 상용차 전진기지로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을 방문,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확인하고 의회차원에서 협력할 부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이날 트럭 1공장, 엔진 2공

장 등 상용차 주요 생산라인을 둘러본 뒤 공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도내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용구 위원장은 “전북도는 친환경자동차산업 전진기지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전기자동차와 스마트 자율주행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일자리창출 및 도내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북도와 협력해 자동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김진성 기자

특검, 김경수 재소환 ‘진실공방 2차전’

첫 조사 이후 3일만... 댓글 조작 사건 주범과 대면할지 주목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라운드 공방이 9일 진행된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특히 댓글 조작 사건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와 김지사가 대면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오는 9일 오전 9시30분 김지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일 만에 다시 김지사를 불러 조사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지사가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이라 평가받는 만큼 한 차례의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검팀은 첫 조사 과정에서

김지사 측 동의를 받아 2차 조사를 진행기로 했다.

특검팀은 김지사를 재소환 조사함으로써 드루킹과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계획이다. 김지사가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점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김지사 측에서는 그간 불거진 의혹과 혐의 모두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지사 측은 첫 소환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사도 첫 조사 후 귀갓길에 오르면서 “(특검 측이)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뉴시스



혁신경제관계 장관회의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혁신경제관계 장관회의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김동연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회의에 앞서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편견, 공익광고로 없애자

김광수 의원, 인식개선 토론회 차별없는 복지사회 구축 앞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발달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해소하고, 공익광고 효과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달장애 인식개선 공익광고 강화방안 토론회를 했다.

김광수 의원은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동반자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에 대한 이

해와 관심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작년 7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걸음마를 떼었지만, 발달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돌봄의 부담 그리고 서비스 부족 등으로 발달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현행법은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명시적 선언에 그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파급력과 영향력이 큰 공익광고를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이 ‘차별없는 사회·함께하는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비롯해 장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쓰고 있는 색안경을 벗을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장애가 어떠한 장벽도 되지 않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사회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허익범 특검 비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8일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을 향해 “드루킹을 수사해야 하는데 드루킹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 나와 “특검 기간이 3분의 2가 흘렀는데 한마디로 남의 다리 굽고 있으면서 특검 본연의 임무가 무엇 인지를 망각한 기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실제 근거 자체가 드루킹의 SNS에 남긴 글 하나를 가지고 마치 엄청난 음모가 그 뒤에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아니면 말고 식인 상황들이 특검 기간 내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드루킹 스스로도 노획한 원

내대표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과정에서 정의당으로서 특검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 기한 연장과 관련해 “이제까지 수사의 진척 상황이라든가 수사 결과가 명확한 게 없다”며 “그 과정에서 계속 정치권 안팎으로 여기 건드리고 저기 건드리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 (기한 연장을)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획한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평화정의정의의원모임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든지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면서 “무소속 인사 중에 영입하는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시스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바탕 전주